

제3차 조선노동당 당대표자회의 정치적 과제

박 형 중

(남북협력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

북한은 2010년 6월 2일 이례적으로 일 년 중 두 번째로 최고인민회의 제12기 3차 회의를 개최했다. 여기서 장성택은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승진했다. 이어서 북한은 6월 26일 정치국 명의로 9월 상순 당대표자회 개최를 예고했다.

북한이 당을 다시 끌어내 전진 배치시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인가? 여러 정치 상황을 볼 때, 조심스럽게 다음과 같은 가설들을 세우는 것이 가능하다. 가장 근본적 목적은 김정일 건강악화에 따른 집무력 약화, 그리고 후계체제 구축에 따라 새로운 정치 권력 체계를 출범시키고 이를 정책적, 이데올로기적으로 정당화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최소 옵션이 있다. 이것은 새로이 구축되는 당의 최고지도기관, 그 중에서도 정치국에 당과 내각의 현직 원로를 형식적으로 충원하고, 김정은에게 조직지도부장 직함과 권력을 주는 것이다. 그러나 당의 중앙기관이 권력 정치적으로 미미한 역할에 머무르는 것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다. 이런 경우 대표자회는 단지 김정은의 등극 선포식이라는 기념식 이외에는 의미가 없게 된다.

다음으로 보다 적극적 권력 재편 시도가 있을 수 있다. 이는 당을 재차 중요한 권력 중추로 복원하는 것이다. 이는 사실상 국방위원회가 대표하고 있는 세력 및 이익에 대한 균형추를 세우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국방위원회와 조선노동당이라는 두 권력기관 간에 견제와 균형, 경쟁과 감시 체계가 수립된다. 여기서 김정일의 이익은 세 가지 일 것이다.

첫째, 국방위원회와 당기구 사이에서 최종적 중재자로서 자신의 권위와 안전을 확보한다. 과거 스탈린과 모택동의 말기에 후계문제와 관련하여 이와 유사한 삼각 균형체제가 수립된 적이 있다. 최고권력자가 어느 한쪽에만 의존하는 경우 위험하기 때문에, 두개의 하부 권력이 서로 상쇄하게 만들면서 자신의 권위와 안전을 보호하는 것이다.

둘째, 김정일의 집무부담을 현저하게 감소할 수 있다. 이는 김정일의 집무모델을 바꾸는 것을 의미한다. 과거에 김정일은 정책결정을 초집중화 시켜 놓고 사소한 것까지도 개인적으로 직접 처리했다. 앞으로는 중앙당 기구를 복구하고 권력을 실어주면서 권한을 이양하고 기관별로 공식적 업무분장 체계를 수립할 것이다. 이는 장성택이라는 개인에게 비밀리에 집무 대리를 시키는 것 보다는 김정일에게 훨씬 안전하다. 김정일은 가장 중요한 결정에만 관여하게 될 것이다. 김일성이 1974년 김정일을 후계자로 지명한 후 그러했듯이, 김정일은 일선에서 물러나서 더 높은 자리에서 추앙받는 또 하나의 '수령'이 되고자 할 것이다. 이미 김정일의 동상이 세워지기 시작한 것이 그 증거이다.

셋째, 후계자 김정은의 권력기반 구축에 넓은 공간을 만들어 줄 수 있다. 당기구를 복구하면, 기존 권력의 인물과 기관을 건드리지 않고서도 김정은이 독자권력 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공간이 확대되기 때문이다.

특히 선군정치가 시작된 이후로 중앙당은 현저히 약화되었고 전체적으로 당기구에 대한 유지보수가 소홀히 되어 왔다. 이 때문에 당기구 체계는 전반적으로 개보수되어야 할 것이며, 당 중앙위 위원을 비롯 수많은 빈자리가 채워져야 할 것이다.

만약 보다 적극적 권력 개편이 시도된다면, 북한 내부에 일정한 파란이 발생할 것을 예견할 수 있다. 김정일이 자신의 휘하에 새로운 권력 중추를 세우고자 추진하면, 누구인가가 그만큼 약화되고 숙청까지 당해야 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과거 사례가 있다. 김정일은 1990년대 초반 본격화된 군부 장악과정에서 1993년 소련 유학파와 1995년 6군단 관련자를 숙청했다. 1995년 선군정치 출범 이후 국방위원회가 강화되는 한편 중앙당의 권한과 기구가 축소되었다. 1990년대 말에는 몇 명의 중앙당 당비서를 비롯하여 중앙당과 지방당의 주요 부분에 대한 숙청이 있었다(심화조 사건). 2005년 중앙당과 공안세력이 강화되기 시작하면서는 내각의 약화와 숙청이 있었다.

앞으로 권력개편과 관련해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 현재 대표적 기득권 세력인 군부의 문제이다. 1995년 이후 군부는 숙청으로부터 자유로왔으며, 선군정치 과정에서 군부의 기관이익 보장을 도모하고 확대해 왔다. 따라서 군부는 기득권 침해를 순순히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둘째, 장기간 지체된 세대교체의 문제이다. 현재의 늙은 지도부와 후계자 김정일은 거의 한-두 세대씩이나 차이가 난다. 양자 사이에는 성향과 기질에서 큰 차이가 있다. 여기에 김정은 세력의 딜레마가 있을 것이다. 김정은 세대가 권력 중추로 등장하자면, 너무 많은 세력이 제거되어야 할 것이고, 상위 세대를 끌어안고 가자면 김정은의 권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김정은은 자기 세대와 (할)아버지 세대를 연결해주는 든든한 후견인을 필요로 할 수 있다.

당대표자회를 기획하고 추진하고 있는 세력의 입장에서 핵심 문제는 군부의 반발을 어떻게 관리하는가이다. 군부는 이중의 장애물이다. 국방위원회에 대표된 군부는 기득권 세력이자 늙은 세력이기 때문이다. 군부는 그 조직체의 규모에 따른 힘, 그리고 대외 안보 상황 문제를 들어 기득권을 지켜왔는데 앞으로도 변화에 저항하려 할 것이다. 만약 군부가 자신의 기득권을 효과적으로 방어한다면, 당대표자회가 최고지도기관을 새로 구성하더라도 여기에 힘이 실리지 않을 것이다.

만약 군부의 저항이 관리된다면, 당대표자회는 세대교체와 새로운 권력 중추의 성립을 의미하게 될 것이다. 이는 또한 김정일 후계 체제가 일단 성공적으로 공식 출범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치국에는 일부 군부 인사가 참여하지만, 당과 내각의 민간인의 비중이 더 클 것이다. 장성택은 국방위원회와 정치국에 동시에 참여할 가능성이 많다. 그는 국방위원회와 정치국, 구세대와 신세대간의 매개역할을 맡을 수 있다. 정치국은 당과 내각의 현직 원로를 중심으로 구성되지만, 보다 젊은 새로운 인물이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 당중앙위원회 위원의 구성은 새로운 세대를 중심으로 구성될 것이다. 김정은 세대(20~30대)로부터 한국전쟁 이후 세대(50대)를 주축으로 구성될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는 군부의 젊은 세대도 대거 참여할 수 있다. 군부 내의 세력 및 세대를 교체하면서도 군부를 안심시키기 위해서이다. 전체적으로 새로운 당 중앙위원회는 북한 상·중층 지도부에서 김정일(현 68세) 이전 세대가 대체로 퇴장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새로운 권력 중추가 등장하자면, 무엇인가 명분과 구심점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그러자면 적어도 외피상으로 새로운 정책과 새로운 이데올로기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전체적으로 사회의 분위기와 어젠다를 바꾸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선군정치가 시작되면서 선군사상이 등장한 것과 마찬가지로, 1996년 등장한 ‘혁명의 수뇌부’ 대신에 2010년에 재등장한 ‘당 중앙위’로 충성의 대상이 바뀌자면, 그 이유도 달라야 한다.



정책상으로는 아마도 경제우선주의가 핵심이 될 가능성이 많다. 핵 보유한 군사강국(그리고, 남조선에 대해 언제든지 치명적 타격할 능력을 성공적으로 과시한 군사강국)으로서, 이제 경제건설에 집중해야 한다는 논리이다. 이러한 논리는 이미 2006년 1차 핵실험이후 간헐적으로 제기되어 왔고, 2010년 신년공동사설 그리고 김정일의 ‘이밤에 고깃국’론에 다시 나타났다. 민생경제 개선을 약속하는 것은 후계자와 새로운 정책주도 그룹이 주민의 신망을 얻기 위해서도 필요할 것이다. 보수적 경제정책은 당분간 바꾸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새로운 그룹의 정치적 주도권이 확고하게 정립되면 달라질 수 있다. 이 경우 새로운 그룹은 경제정책을 바꾸어도 자신의 이권이 보장된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을 것이고, 따라서 경제정책을 세상의 큰 흐름에 편승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데 조금 더 적극적으로 될 가능성이 있다. 그 반면, 경제문제에 해결책이 없을 뿐 아니라, 실리를 중시하는 새 세대의 정향에도 불합치한다.

새로운 이데올로기의 핵심은 새 세대와 새 시대, 그리고 밝은 미래와 큰 변화를 선포하는 것이 될 것이다. 2010년 3월경 평양의 제1백화점 앞에 등장했다는 포스터가 미래를 암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¹⁾ 이 포스터에는 2009년 4월 열린 대규모 불꽃놀이인 ‘축포야회’ 장면과 장거리 로켓을 배경으로 ‘CNC’(수치제어장치)와 ‘세계를 향하여’라는 문구가 큰 글씨로 새겨져 있었다. 아울러 당이 앞세워지면서 ‘당은 인민을 위하여’는 포퓰리즘적 선전이 강화될 것이다. 이는 당과 ‘인민’ 사이에 거리가 멀어지고, ‘인민’이 점점 더 정치적으로 우려스러워지는 상황을 반영한다. 참고하자면, 북한에서 과거 당은 ‘어머니 당’의 이미지로 형상화되어 있었다.

북한당국은 당기구를 보강하고 젊은 세대를 포섭(co-optation)하여 기층의 충성을 복구하고 전사회에 대한 정치적 장악력을 확대하고자 할 것이다. 그러나 변화된 환경 때문에, 중하부 당기구와 당조직의 역할은 변화해야 할 것이다. 당조직의 활성화가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조직생활을 복구한다는 것을 의미할 지에 대해서는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북한 당국은 당조직의 쇄신과 정당성 보강을 위해 아마도 ‘비사회주의 투쟁’과 같은 방법을 동원하여 중하부의 ‘부패한’ 당원/간부에 대한 숙청을 상당한 규모로 추진할 수도 있다.

그런데 대외 안보 환경이 바뀌어야 위에서 언급한 정책들이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러나 대외정책은 당분간 바꾸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목표는 1차 핵실험 이후 상황을 재현하는 것이 될 것이다. 북한은 핵 무기 보유를 기정사실화하면서, 미국과 양자교섭 관계를 트는 한편, 한국의 대북 지원을 보장받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입장을 경직되게 고수하면, 대외 고립과 긴장 격화, 내부 경제 악화로 새로운 지도부가 중기적으로 대내 정치적 난관에 봉착할 가능성이 높다. 중장기적으로 새로운 지도부는 타협을 모색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핵 무기 제거까지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며 보상이 만족할만하다는 전제가 성립하는 경우에 그러할 의지가 높아질 것이다.

결론적으로 당대표자회에서 무엇을 할지에 대해 북한 내부에서는 아직도 결판이 나지 않았을 수 있다. 또는 앞으로 변경될 수도 있고 타협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 그 이유는 당대표자회에서 무엇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 주요 세력 간의 이해관계가 상당히 갈리기 때문이다. 그러나 당대표자회 개최를 주도하고 있는 세력은 대회 개최 선포에 성공했다. 이 세력의 궁극적 목표는 이 기회를 통해 권력체계를 상당하게 개편하는 것이다. 그러나 여러 가지 조건들은 그 목표 달성이 쉽지 않다는 것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에 당대표자회 성공 여부에 따라 권력개편의 성패가 달라질 것이다.

1) 차대운, “평양에 ‘김정은 상징’ 선전화 등장?,” 『연합뉴스』, 2010년 3월 14일.

